

# 광주·전남 국회의원 4명 이제는 ‘법정의 시간’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준호·안도걸·신정훈·김문수 의원 기소 박균택 의원은 불기소...공소시효 만료따라 현역 의원 11명 재판에

제 22대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건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됨에 따라 광주·전남 현직 국회의원들이 법정의 시간을 맞게 됐다.

검찰이 이날까지 기소한 현직 여·야 국회의원 1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이다.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광주·전남지역 현직 국회의원 18명 중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시 북구 갑)·안도걸(동·남구 을)·신정훈(나주·화순)·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등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 2월께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화 홍보부장, SNS간사직을 맡은 이들도 정 의원과

같이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정 의원은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했다고 봤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 사무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으로 1680여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에게는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지난 9월 4일 첫 재판 기일이 잡혔으나 세 차례 연기돼 오는 30일에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총선 경선을 앞두고 사촌동생과 공모해 불법전화를 운영한 혐의로 안 의원도 법정에서 서게 됐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등 선거사무소 종사자 10명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동으로 한번에 20명을 초과해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총 5만1346건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을 담당했던 경선운동 관계인 10명에게 대가로 총 25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안 의원이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운영비 명목으로 A씨 운영 법인 자금 약 4300여만원을 수수한 점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안 의원이 지난해 11·12월 인터넷판 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시 동구와 남구 주민 431명의 성명·주소·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 받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는 28일 광주지법에서 안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불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총선에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기소 기소했다. 신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지지자 일동'이라는 명의로 보낸 혐의로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시 광산 갑)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된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불기소 기소됐다.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박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지난 4월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1명의 현역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전남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소된 의원은 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허중식 의원 등 5명이고, 국민의힘에선 구자근·조지연 의원 등이 기소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동성혼 금지 현행 민법 위헌” 동성 부부 11쌍 소송 나서

동성 부부 11쌍이 국내에서도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기 위해 소송에 나선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장기간 함께 거주하고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자 “현행 민법이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에 나섰다.

지난 7월 사실상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이끌어 낸 김용민(34)·소성욱(33) 부부도 소송 당사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11일 서울가정법원 및 4개 재경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후 각 법원에 이성 부부의 혼인만 허용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심사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법원이 이 용을 받아들인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고, 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들이 직접 현재에 현행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목표로 소송이 제기되는 건 연회합감 독조공수씨 이후 2번째다. /연합뉴스

# 5·18유족회 “광주-서울법원 배상액 차이 유감”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5·18유족회)가 광주법원이 서울법원보다 5·18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배상액을 최대 4분의 1 수준까지 차이나게 산정한 것(9월 30일자 광주일보 6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5·18유족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1980년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와 인명살상, 인권탄압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5·18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5·18유족회는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자의 경우 4억원, 장애 14등급은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광주법원에서는 사망자에 대해 2억 원,

장애등급 14등급에 대해 500만~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배상액 차이는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대한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며, 국가에 의한 책임 있는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배상 판결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지 않도록, 국가와 사법부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환경사랑이 미래사랑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의 '환경사랑 미래사랑 프로젝트 성과공유회'가 10일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광장에서 열렸다.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재활용품으로 만든 조형물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받은 50대, 항소심서 선처 호소

고형 선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심리로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고흥에서 고향선배인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공터에 있는 공중화장실 옆에 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술자리를 하다 범행을 저질렀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생명의 가치는 존엄하고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A씨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족이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1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고 정의를 세운다며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양형기준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전자정지 부착과 보호관찰 처분을 기각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검찰은 “재범 우려를 고려해 최소한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월세 갈등? 고흥서 주택 화재로 세입자 숨져

고흥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숨졌다.

10일 고흥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고흥군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에 혼자 살고 있던 세입자 A(여·69)씨가 전신3도 화상을 입어 중주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불은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진화됐으나 집안 일

부가 불에 타 84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이 발견됐고 집주인의 “A씨와 월세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A씨의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